



여수박람회
유치 2주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2주년 기념식이 26일 오후 여수시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해 오현섭 여수시장 및 주요 인사, 시민들이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 기자 ykpark@

현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한 판결

혼빙죄 56년만에 역사속으로
민사소송으로 피해 구제 가능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이 1953년 제정 이래 56년 만에 위헌 판정을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26일 2002년의 합헌 결정을 뒤집고 혼인빙자간음죄를 위헌으로 선언한 데는 급속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과 세계적 흐름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53년 혼인빙자간음죄가 포함된 형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여성의 성적 순결이 중시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계 또한 전반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반세기 가 지나는 동안 성에 대한 개방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조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약화했고, 오히려 여성만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남성만 처벌하는 것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서서히 싹텄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점차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번 심판 사건에서 여성부가 같은 정부 부처인 법무부의 존치 의견에 맞서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여성 비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지 의견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보호 대상인 여성 스스로 혼인빙자간음죄를 보호의 외양을 갖춘 차별 도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현재 재판관들 또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반세기 만에 형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는 점도 이번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학계의 대표적 인사들로 구성된 헌법 개정연구회는 형법 개정을 앞두고 최근 마련한 시안에서 “혼인 여부는 여성 또한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여서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혼인빙자간음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를 참고해 형법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가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혼인빙자간음죄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혼인빙자간음 조항이 실제 적용돼 형사 처벌에 이르는 경우도 급격히 줄어들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위헌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혼인빙자간음으로 기소된 사람은 25명,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명에 불과하다.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더라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 받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민법상의 불법 행위는 특정한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 정해놓은 것보다 범위가 넓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우가 명백한 기망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받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 5개 내외 광역지방정부 만들자

■ 오늘 지방행정체제 개편 호남권 공청회

광역→기초, 단계적 통합 갈등 줄여야
주민투표 필수...도 폐지는 신중 기해야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로 통합해 광역 지방정부로 운영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27일 오전 10시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주최 ‘지방행정체제 개편 호남권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서 나왔다. 이견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자료집에서 “통합 기초단체간 조정과 중앙정부와 연계 기능을 위해 당분간 도는 존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국을 5개 내외의 광역자치

단체로 통합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5대 광역정부를 제시했다. 김 처장은 “광역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조세권을 부여하는 등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인구를 기준으로 500만 이상의 광역지방정부를 만들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가장 이상적인 광역정부는 수도권(서울·경기 일부), 중부권(경기 일부·충청),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영남권(대구·경북·부산·경남), 제주특별자치

도의 형태다”며 “하지만 단계적으로 광역시와 도로 분리돼 있는 지자체들을 먼저 통합한 뒤, 또 상위 지자체를 통합하면 저항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했다.

반면 강인호 조선대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 의의와 생활행정은 기초단체가 수행하고 광역업무는 도가 하는 것이 옳다”며 도(道) 폐지를 반대했다. 강 교수는 “통합 문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중대사안만큼 대표성 논란이 우려되는 여론조사나 지방의회 가결이 아닌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완기 전북대 교수는 “동일 정치권, 특히 동일 선거구인가의 여부는 통합기준이 될 수 없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민 필요성 중의 하나가 정치에 의해 파생된 지역이기주의 타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실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으로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며 “개

편 과정에서 정치권의 당리당략이나 기득권층의 입김이 작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실장은 “한국만의 특수한 분단 상황도 고려해 남북통일 후까지를 생각한 장기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전북일보 정치팀장은 “전주-완주 자율통합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의중이 반영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적 찬반결정이 불가능한 자율통합 추진이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론을 반영한 최적의 개편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한은, 중기물가 목표 2~4%로

경기회복 위해 통화정책 신속 운용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가 소비자물가상승률 3.0% 기준 상하 1.0%포인트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물가허용 범위가 현재의 2.5~3.5%에서 2010~2012년에는 2.0~4.0%로 확대된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물가허용범위 확대는 최근의 소비자물가 움직임, 주요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히고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변동 허용폭인 상하 0.5%포인트는 다소 좁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 이후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다 국제 원자재가격, 환율 등의 움직임에 따라 물가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

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현재는 특정 연도의 물가가 허용 범위를 넘었더라도 3년 평균이 범위에서 벗어 나지 않았다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내년부터는 매년 물가가 목표범위에 들어가지도 못하더라도 물가목표를 정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2~3년 가량 주기적으로 물가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물가가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은은 경기 회복을 위해 보다 신속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온실가스 통계관리
지자체 표준안 마련

환경관리공단 180개 분야

환경관리공단은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2006년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산정 표준지침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지침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축산·산림 및 토지 이용, 폐기물 등 180개에 달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통계 관리) 전 분야에 대한 기준을 각각 제시해 지자체가

배출량을 산정할 때 인벤토리의 통일성과 완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지침은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emc.or.kr)나 기후변화홍보포털(ghoo.or.kr)에 게재돼 있다. 공단은 표준지침을 토대로 내년에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벤토리(온실가스 배출 통계)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남 도민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